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원안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4대강 … 연말 정국 '한치 앞 안보인다'

與 "세종시 국민설득" 野 "충청서 장외 투쟁"

내년 예산안 심의 본격화 … 공전 불가피할 듯

여야가 세종시 수정 건설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새해 예산안 심의가 공전되는 등 연말 정국이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회동을 갖고 "정부가 서두를 테니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당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 세종시 수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어려운 예산국회를 이끌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세종시 원안 수정과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직접 영남과 호남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부터 세종시 수정을 위한 여권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당장, 당·정·청이 이번 주부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며 충청권 민심 수습에도 전력하는 등 '전방위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1일 헝가리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에 박 전 대표를 초청,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해를 구할 예정으로 알려져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 건설 문제는 여권 입장에서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세종시 수정 건설에 여권이 총력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여권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 저지에 공조를 모색하는 한편 이번 주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당의 경우 1일 청주를 시작으로 3일 천안, 8일 대전에서, 자유선진당은 2일 태안.서산, 3일 보령, 8일 아산 등에서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번 주 세종시 원안 고수를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키 위한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의 주장하는 고뇌에 찬 결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법치를 요구한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 총재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행정부처 이전의 경우 법까지 만들어졌고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이상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새해 예산안 심의도 4대강 예산 문제 등으로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3일 오전 예결특위의 추후 심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늦춰지면서 이번 주 예결특위가 정상 가동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16개 상임위 중 예산안 심의를 마친 상임위는 3곳에 불과한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해양위는 1일부터 예산심사 소위를 가동한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와 예산안을 직접 연계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편성한 4대강 예산을 1조원 안팎으로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 국장, 주호영 특임장관에 탄원 편지"

송영길 민주당 '한 게이트' 조사단장 … 이 법무 "도곡동 땅 이미 결론"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0월 추석 직전에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국장은 특히 편지에서 P기업 세무조사 때 도곡동 땅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문건을 보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 국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점을 탄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3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며 편지를 공개했다.

안 국장은 편지에서 "2년 가까이 한상률씨에 이어 허병익, 이현동씨가 3대를 이어가며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으로 저를 쫓아내려는 걸 홀로 겪으면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했다. 안 국장은 자신이 현 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음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당시 본청 감찰과장이 저를 찾아와 명예퇴직신청서를 주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안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 MB 관련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전 정부 사람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번 6월 말까지 명예퇴직신청을 하면 좋은 모양으로 나갈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7년 7~8월경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P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VIP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그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 문건은 P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문건을 본 순간 매우 당황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본질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풍파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 담당직원에게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VIP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서술했다.

민주당은 안 국장 편지를 공개하면서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답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안 국장의 주장과 관련,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미 검찰이 수사도 하고 특검까지 했는데 (이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구체적 사용 범위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징수한 수신료를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한 시청기회 제공 등 한국방송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사용범위를 구체화했다.

서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수된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신료의 구체적인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악법 서명' 공로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승용 의원)이 '언론악법 폐지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활동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지난달 30일 공로패를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언론악법 폐지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은 모두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졌는데 전남도당만 전국 시·도당 중 유일하게 도당 자체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둬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으로 공로패를 받은 것은 전남도당이 전국 시·도당 중 유일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盧 전 대통령 상속재산 빚이 더 많아

재산 13억·부채 16억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국세청과 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지난주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재산을 13억여원으로, 부채를 16억여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임야가 대부분이고 부채는 사저 건축비 충당을 위한 은행 대출 등이었다. 은행 빚과 막대한 이자부담을 더 많이 물려줬다는 것이다.

딸 정연(34)씨의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구매자금 40만달러 등은 상속세 신고 내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올 5월23일 서거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은 지난주까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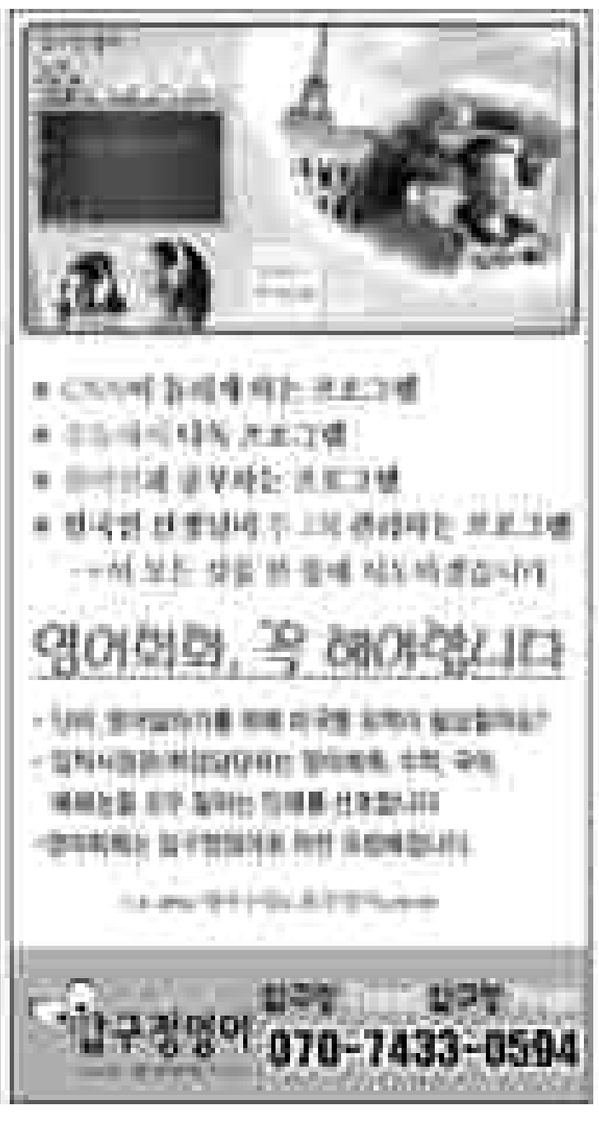
국세청은 앞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6개월 이내에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하게 된다"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측은 "국세청에서 정보가 나간 것 같은데 개인의 세무 사항을 흘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지 싶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아프간 파병 동의안 이달 중순 제출"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차관회의,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빨라야 그 다음 주쯤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 실사단 파견 시기와 관련, 원 대변인은 "이런 (동의안 국회 제출) 일정과 별개로 국방부 자체 실사단을 아프간에 보내겠지만 아직 날짜가 잡힌 바는 없다"며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싶을 때 실사단을 보낼 것이며, (모든 절차를 다) 밟은 뒤 보내면 늦을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